

## 백범 김구의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의 꿈\*

한 시 준\*\*

### Ⅰ 국문초록 Ⅰ

백범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해방 후 국토와 민족이 분단될 위기를 살아가면서 당면한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 지도자였다. 그의 활동에는 목표가 있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과 민족의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꿈도 갖고 있었다.

백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가 건설하고자 한 자주독립국가는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를 유지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43년 미국과 영국사이에 전후 한국문제를 국제공동관리로 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또 해방 후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제공동관리와 신탁통치는 일제에 이어 또다른 열강들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백범은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는 상황을 보면서,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일제 패망과 더불어 소련군과 미군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또 이승만을 중심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추진되면서, 국토와 민족이 분단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통일국가 수립을 추진하였다.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북에서도 정부를 수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족은 분단된다는 것이다. 민족분단의 결과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소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을 하게 되는 민족적 참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백범은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소 양군 철퇴 → 남북요인회담 → 남북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 수립이 그 방안이었다. 백범은 김규식과 함께 이를 추진하였고, 유엔위원단에게도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북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하자며,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을 제의하는 서신을 보냈다. 1948년 4월 평양으로 올라가 남북협상을 전개하였고, 미소 양군 철퇴 → 전조선정치회의의 소집 → 임시정부 수립 → 통일적 입법기관 설립 →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방안과 절차에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백범은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백범의 꿈은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 즉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우선 남의 간섭 없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국가를 세워 수준 높은 문화를

\* 이 논문은 2015년도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 / seejhan@dankook.ac.kr

창조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민족마다 최선의 문화를 갖는 문화국가를 세우자고 하였다. 문화국가를 세워 각 민족이 서로 돕고 사는, 즉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지는 것이 백범의 꿈이었다.

[주제어]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주독립국가, 신탁통치, 통일국가, 남북협상, 문화국가, 세계평화

### 목 차

I. 머리말	IV.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 추진
II. '국가'와 '정부'를 운영한 경험	V.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에 대한 꿈
III. 해방 후 임시정부의 봉환 방침과 과도정권 수립 추진	VI. 맺음말

## I. 머리말

白凡 金九(1876~1949)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해방과 민족분단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당면한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그의 활동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시기에는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고, 민족의 분단을 맞아서는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극복하였지만, 백범 김구(이하 백범으로 약칭)가 목표로 삼았던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민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우리보다 앞서 이를 추진하였던 지도자들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지혜와 방안을 찾는 일이다. 그러한 대상 중 대표적 인물이 백범이 아닐까 한다.

백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으로 '국가'와 '정부'를 유지 운영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는 지도적 인물이다. 그리고 자주독립국가와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그 방안을 제시하고 활동하였으며,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평화에 대한 방안도 피력하였다. 백범의 이러한 활동과 경험은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 아닐 수 없고, 그동안 주요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sup>1)</sup>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백범이 구상하고 추진하였던 해방 후 신국가건설, 즉 자주독립국가·통일국가·문화국가 건설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백범의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면서,<sup>2)</sup> 기존의 연구성과를 보완할 필요가 생겨났다.

1) 도진순, 「해방 직후 김구·김규식의 국가건설론과 정치적 의미」,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김삼웅,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한시준, 「백범 김구의 신국가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3, 2005; 신용하, 「백범 김구의 새 민주문화국가 건설론과 세계평화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6, 2008; 정병준, 「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사상」,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7, 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 글은 선학들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백범의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과 방안, 그리고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평화에 대한 그의 꿈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백범은 해방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국가’와 ‘정부’를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민들에게 봉환하려 하였다라는 점과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점, 그리고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국가’와 ‘정부’를 운영한 경험

###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백범을 이해할 때, 특히 그의 독립국가 건설 구상을 이해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백범은 해방 이전에 ‘국가’와 ‘정부’를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백범이 ‘국가’와 ‘정부’를 운영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다는 것을 말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계기가 있었다. 1919년 3월 1일 발표된 독립선언이 직접적 계기였다.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 독립선언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독립국’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상해로 모여 들었다. 상해로 모인 데는 목적이 있었다. 독립선언을 통해 천명한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먼저 요즘 국회와 같은 임시의정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sup>3)</sup> 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 그리고 이를 유지 운영하기 위한 임시정부를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로 약칭)의 수립은 한국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한국민족이 대한제국에 이어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세웠다는 점이다. 둘째는 수립과 더불어 제정 공포한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하여,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한국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세워졌다. 그리고 한국민족의 역사가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게 되었다.

2) 오대륙의 『해방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가 발표되었고, 해방 후 국내에서 속간되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도 대부분 수집되어 『(환국속간)독립신문』(백범학술원, 2012)이란 이름으로 영인 간행되었다. 『환국속간 독립신문』은 1946년 12월 27일 제1호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1949년 3월 31일에 발행된 제388호까지 대부분 수집되었다.

3)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57-62쪽.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새롭게 출발하였다.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후 상해 이외에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가, 국내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세 곳의 임시정부는 통합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위치는 상해에 둔다는 데 합의하고 통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 등을 선출하여,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이후 임시정부는 1945년 8월 해방을 맞아 국내로 환국할 때까지 27년여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그동안 임시정부는 ‘국가’와 ‘정부’로 역할하며, 동시에 독립운동을 지휘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독립운동 최고기구로서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극복해 가면서, 임시정부는 27년여 동안 존립하며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 2. 행정수반으로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

임시정부를 이끈 대표적 인물이 백범이다. 백범은 1919년 4월 13일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임시정부에서 그가 처음 맡았던 직책은 경무국장이었다. 수립 직후 내무총장 안창호를 찾아가 ‘문지기를 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안창호가 백범을 경무국장에 임명한 것이다.<sup>4)</sup> 이후 백범은 내무총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다 1926년에 國務領, 1940년에는 主席으로 선출되었다. ‘국무령’과 ‘주석’은 대통령의 칭호를 바꾼 것으로, 행정수반의 명칭이었다. 백범은 국무령과 주석으로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한 최고 책임자였다.

1925년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었다. 바꾼 이유는 대통령 李承晩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승만은 1919년 9월 11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상해에 부임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해에 있는 국무총리 李東輝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 이승만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고,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파란을 겪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1920년 12월 상해에 부임하였지만, 5개월만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파란은 수습되지 못하였다.<sup>5)</sup>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사퇴하고 상해를 떠났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들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朴殷植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대통령에 취임한 박은식은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만주지역의 지도자인 李相龍·梁起鐸, 이어서 安昌浩·洪震을 국무령으로 선출하였다. 국무령제로 파란을 수습하려 하였지만, 선출한 국무령이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취임하지 않았다. 이로써 임시정부의 난국은 수습되지 못하였다.

임시정부가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수습 책임을 맡은 것이 백범이었다. 백범은 李東寧 등의 권유로 1926년 12월 국무령에 취임하였다.<sup>6)</sup> 이로써 백범은 임시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수반이 되었

4) 김구, 『백범일지』(백범학술원총서2), 나남출판, 2002, 304쪽.

5) 한시준,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연구』, 연세대 출판부, 2000, 195쪽.

다. 국무령에 취임한 백범은 내무·외무·군무·재무·법무 등 행정부서 책임자를 임명하여 정부의 조직을 갖추었다. 이로써 임시정부의 무정부상태가 수습되었다. 이후 백범은 1927년 4월 국무령을 중심한 단일지도체제를 국무위원회를 중심한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헌법을 개정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임시정부는 1940년까지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회체로 운영되었다. 이동안 사실상 임시정부를 이끌어 간 것은 백범이었다. 1932년 李奉昌·尹奉吉의사의 의거를 추진하여, 정부의 존재를 되살려냈다. 그리고 1935년 5개 정당 및 단체가 통일하여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면서 존립위기를 맞았을 때도,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여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해 나갔다. 수립 초기에 파란에 휩싸이고, 또 여러차례 존립위기를 맞았지만, 임시정부가 유지 운영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백범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역할과 공헌으로 백범은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었다. 임시정부는 1940년 重慶에 정착하면서,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확대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로 바꾸는 헌법을 개정하였고, 주석에 백범이 선출되었다.<sup>7)</sup> 주석은 행정수반으로 국가 원수의 위상이었다. 이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백범은 주석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 Ⅲ. 해방 후 임시정부 봉환 방침과 과도정권 수립 추진

#### 1. 임시정부를 국민에게 봉환

백범이 일제의 패망 소식을 접한 것은 西安에서 였다. 광복군과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의 국내진입 작전을 협의하기 위해 서안에 왔다가 일제의 항복소식을 접한 것이다. 일제의 항복소식이 알려진 것은 8월 10일이었다. 중국의 방송들은 이날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일제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고,<sup>8)</sup> 백범도 이 소식을 서안에서 들은 것이다.

일제의 항복소식을 접한 백범이 중경으로 돌아온 것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백범은 서안에서 일제의 항복소식을 듣고 곧바로 광복군 제2지대 본부로 향했다. 총사령 李靑天, 제2지대장 李範奭 등과 광복군의 국내진입작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협의에서 백범은 OSS훈련을 받은 광복군대원들을 국내에 진입시킬 것을 결정하고, 8월 17일 중경으로 돌아왔다.<sup>9)</sup>

백범이 돌아왔을 때, 임시정부는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일제의 항복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무회의에서는 '귀국해서 정권을 국민에게 봉환한다' '국민에게 반포할 당면정책을 기초한다'는 것과 함께 임시정부 그대로

6)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5호(1926년 12월 17일).

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3(임시의정원2), 2005, 8~9쪽.

8) 양우조·최선화, 『제시의 일기』, 해음, 1998, 239쪽.

9)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6, 1999, 738쪽.

입국한다는 방침을 결의하고,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7일 제39차 임시의회가 열렸다. 그러나 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야당측에서 ‘국무위원의 총사직’과 ‘임시정부 개조’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주석인 백범이 돌아온 후, 휴회에 들어갔던 임시의정원 회의가 속개되었다. 8월 21일이었다. 백범은 회의에 출석하여 서안에 다녀온 경과를 보고하고, 야당측의 요구에 대해 “현직 국무위원은 총사직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27년간 우리가 대행하던 임시정권을 해방된 국내 인민에게 봉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sup>10)</sup> 현 임시정부 그대로 귀국하고, 국내의 국민들에게 임시정부를 봉환한다는 것이었다.

야당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족혁명당을 비롯하여 신한민주당·조선민족해방동맹 소속 의원들이 “현 국무위원이 총사직하기 전에는 여하한 제의안도 결의할 수 없다”며,<sup>11)</sup> 퇴장한 것이다. 야당측 의원이 퇴장하면서 법정의원수가 부족하게 되었고, 회의는 그대로 휴회되고 말았다.

백범은 임시의정원에서 밝힌 대로 임시정부는 국내의 국민들에게 봉환하고, 이를 위해 현 임시정부 그대로 귀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국내외 동포에게 고향’이란 성명서와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가 추진할 정책을 ‘당면정책’이란 이름으로 작성하고, 이를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다음 날인 9월 3일 주석 명의로 발표하였다. 당면정책은 모두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임시정부는 최속 기간내에 입국할 것(제1항)
- 전국적 보선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종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영수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제6항)
-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에 본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인하고 본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물건은 과도정부에 교환할 것(제7항)
-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정권은 반드시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한 신헌장에 의하여 조직할 것(제8항)
- 국내의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외 일체 관계를 본정부가 부책 유지할 것(제9항)<sup>12)</sup>

당면정책의 핵심은 임시정부를 국민들에게 봉환한다는 데 있었다. 그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가 과도정권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과도정권은 국내외 각 계급·혁명당파·종교집단·지방대표·저명한 민주영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통해 수립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과도정권이 주도하여 정식정부를 수립하고, 수립된 정식정부에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인계한다고 하였다.

이는 정식정부를 수립하기까지의 과정과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즉 임시정부 → 과도정권 수립 → 보통선

1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임시의정원3), 2005, 163쪽.

1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임시의정원3), 164쪽.

12)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선생전집』 5, 1999, 670쪽.

거 실시 → 정식정부 수립 → 정식정부에 임시정부 인계라는 절차였다. 다만 과도정권이 수립될 때까지는 임시정부가 정부로서 활동한다는 것이고, 정식정부는 독립국가·민주정부·균등사회를 원칙으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가 임시정부를 국민에게 봉환한다는 계획은 뜻대로 이루지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임시정부 그대로 입국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미군정의 요구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입국 후에도 미군정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2.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과도정권 수립 시도

백범은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였다. 개인자격으로 입국한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 미군정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로 입국한 후, 백범은 임시정부로 활동하고자 하였다. 기자들이 귀국 소감을 묻자,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자격이지만 국내동포의 입장에서는 정부”라 하였고, 임시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선전부장 嚴恒燮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자격이지만 국내에 있어서는 정부자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sup>13)</sup>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임시정부를 연호하며 환영하였다. 12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귀국을 환영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봉영회가 개최되었을 때, 3만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 그리고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을 방문하거나 귀국을 환영하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전국 곳곳에서 임시정부의 귀국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다.

백범이 거주하던 경교장은 임시정부 청사나 마찬가지로였다. 제2진이 도착한 후, 12월 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경교장에 모였다. 이 모임에는 제1진과 제2진으로 귀국한 임시정부 국무위원 전원, 그리고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도 참석하였다. 당시 신문들은 이날의 모임을 ‘還國 후 奎閣僚가 모여 最初의 國務會議’을 개최한 것으로 보도하였고,<sup>14)</sup> 임시정부는 이후에도 경교장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백범은 귀국 후, 당면정책을 통해 친명한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한 것이 이를 위한 활동이었다. 정치공작대는 임시정부의 조직을 확대하고 국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행정연구위원회는 과도정권 수립에 필요한 행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내무부 산하에 설치하였고, 내무부장 申翼熙가 그 책임을 맡았다.<sup>15)</sup>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 역할을 수행하고자 시도한 것은 신탁통치반대운동을 계기로 해서였다. 12월 28일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범은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반탁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13) 『조선신보』 1945년 11월 25일자.

14) 『자유신문』 1945년 12월 4일자.

15) 박진희, 「해방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1, 1996, 170~180쪽.

때 신익희가 서울시내 9개 경찰서장을 불러 반탁운동에 호응할 것을 명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정부가 정부로 역할할 것이라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한 것이다.

### 國字 제1호

현재 전국행정청 소속의 경찰기관 및 한인직원은 전부 본 임시정부 지휘하에 예속케 함

### 國字 제2호

此 운동은 반드시 우리의 최후 승리를 취득하기까지 계속함을 요하며, 일반 국민은 금후 우리 정부 지도하에 제반 사업을 부흥하기를 요망함.<sup>16)</sup>

이는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당시는 미군정이 통치하던 때였고, 미군정은 “38선 이남의 조선 땅에는 미군정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정부가 존재할 수 없다”며,<sup>17)</sup> 한국인에 의한 어떠한 정부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다.

임시정부가 정부로 역할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다. 이에 대해 미군정이 크게 반발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이를 임시정부가 정권을 탈취하려는 ‘임시정부의 쿠데타’로 받아들였고,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처단하거나 중국으로 추방하려고 했다. 1946년 1월 1일 백범이 미군정 사령관 하지를 만나 수습되기는 하였지만, 포고문을 발표한 신익희는 미군정에 연행되어 신문을 받았다.<sup>18)</sup> 그리고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미군정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되었다.

백범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다. 1946년 1월 4일 “남의 손을 기대할 것 없이 우리의 손으로 신속히 강고한 과도정권을 수립하자”고 하면서, 각계각층의 혁명당파와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주영수들을 망라하여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의한 것이다.<sup>19)</sup> 백범의 이러한 제의는 당면정책에 있는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족영수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었다.

백범의 이러한 제의는 비상국민회의로 결실을 맺었다. 1946년 2월 1일 각계 인사 195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 천주교회당에서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한 것이다. 비상국민회의는 임시정부의 국회 역할을 하던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기구였다. 의장과 부의장도 임시의정원 의장과 부의장인 洪震과 崔東旼를 그대로 선출하였다.

백범은 비상국민회의를 통해 과도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비상국민회의가 활동을 시작하자, 미군정에서 이를 막았다. 사령관 하지는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임시정부를 분쇄해야 한다”며, 지금이 임시정부의 권위를 빼앗을 적절한 시기라는 내용의 훈령을 내린 것이다.<sup>20)</sup> 그리고 비상국민회의를 미군정의 자문기구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가 알려지면서 김원봉·장건상·성주식·김성숙 등 국무위원들이 임

16)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 1968, 722~723쪽.

17) 김광옥, 「해방직후 미군정의 유일정부적 권위의 확립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9, 1998, 288~289쪽.

18) 한시준, 「해방 신익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41, 2007, 118쪽.

19) 『서울신문』 1946년 1월 5일자. 「비상정치회의를 즉시 소집하자」.

20) 도진순, 「1945~1946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우익진영의 분화」, 『역사와 현실』 7, 1992, 361쪽.

시정부를 떠났다.

비상국민회의는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해 나갔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로 하여 헌법·선거법·의정원법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기로 하고, 김병로·이인·김준연·신익희 등을 기초위원으로 선정하였다.<sup>21)</sup> 법률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주도하에 제정한 법률을 근거로 선거를 실시하여 과도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최고정무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좌절되고 말았다.

최고정무위원회 문제는 비상국민회의 설립 당시에 제기되었다. 최고정무위원회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회와 같은 것으로,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임시정부의 권위를 빼앗으려는 미군정과 이승만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를 반대하였지만, 최고정무위원회 설치안은 가결되었고, 위원의 선정은 이승만과 김구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최고정무위원회는 설치와 더불어 명칭이 바뀌었다. 2월 13일 28명의 최고정무위원 명단이 발표되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명칭이 달라졌다. 2월 14일 결성식을 거행하면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명칭만 아니라 성격도 달라졌다. 백범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결성식에서 이승만은 민주위원이 미군정의 자문기관임을 강조한 것이다.<sup>22)</sup>

민주위원의 성격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지만, 조직은 갖추어졌다.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규식, 국무총리 김구가 임명된 것이다. 그리고 산하에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문교부, 법무부, 치안부, 농림부, 상공부, 광무부, 교통부, 우정부, 후생부, 공보부 등 14개 부서가 설치되었다.<sup>23)</sup> 이는 외형적으로 과도정부의 형태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4개 부서 책임자는 선임되지 않았다.

민주위원을 과도정부 수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백범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민주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국민회의 의장 홍진은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위원은 서로 다른 것임을 선언하였고,<sup>24)</sup> 이를 과도정부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과도정권을 수립하려면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좌우합작을 추진한 것이다.

### 3. 국민의회 설립과 과도정권 수립

백범은 1947년을 맞아 다시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정국에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미소공동위원회의 걸림돌이었던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를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지는 데 대해 미소가 합의를 이루었고, 중단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움직임이 일어나자, 백범은 다시 반탁운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비상국민회의와

21) 오대륙,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09쪽.

22)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529쪽.

23) 정병준, 「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활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백범학술원, 2009, 252쪽.

24) 한시준,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홍진』, 탐구당, 2006, 325쪽.

민족통일총본부·대한독립촉성국민회 3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1947년 1월 24일 우익진영의 35개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한 반탁독립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반탁독립투쟁위원회는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기구로 설립한 것이었다. 위원장은 백범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조소앙·조성환·김성수가 선임되었고, 이승만은 최고 고문으로 추대되었다.<sup>25)</sup>

백범은 반탁운동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국민회의를 중심으로 민족세력의 결집을 추진하였다. 비상국민회의가 수십년 독립운동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니, 이를 확대 강화하여 최고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자는 논리였다. 그리고 자신의 민주의원 참가, 미소공위 제5호 성명에 서명한 것, 좌우합작지지 등에 대한 과오를 자책하고, 비상국민회의·민족통일총본부·독립촉성국민회의 통합을 촉구하였다.<sup>26)</sup>

3단체의 통합은 비상국민회의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비상국민회의는 2월 14일 백범을 비롯한 87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독립촉성국민회측에서 미국에 가 있던 이승만이 통합에 대해 보류하라는 전문이 있었다며,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월 17일 속개된 세 번째 회의에서 비상국민회의의 명칭을 대한민국국민회의로 개칭하기로 하고, 통합문제는 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되었다.<sup>27)</sup>

국민회의는 임시정부의 입법기구였던 임시의정원과 비상국민회의를 이은 것으로, 과도정권 수립을 위한 입법기구이자 국회였다. 국민회의 스스로도 그 조직대상을 통해 “국민회의는 대한민국의 국회로서 국가의 최고결의기관임”(총칙 제1조)이라고 하였다. 국민회의 의장은 조소앙, 부의장은 유림이 선출되었다.

백범은 국민회의를 통해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비상국민회의를 통해 시도한 데 이어 두 번째였다. 과도정권 수립은 임시정부를 확대 강화하고 봉대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비밀리에 추진되어 그 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당시 과도정권 수립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이 남긴 글을 통해 그 실상은 대략 짐작할 수 있다.<sup>28)</sup>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한 별도의 기구가 있었던 것 같다. 한국혁명위원회라는 단체가 그것이다. 한국혁명위원회는 독립촉성국민회의의 주요 간부인 조성환·정인보·김석황·김승학·조상향,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의 이을규·이정규·유정렬 등이 연계하여 조직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혁명위원회 산하에 전위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특별행동대총사령부라는 조직을 두었던 것 같다. 특별행동대총사령부는 독립촉성국민회 지방조직원 중에서 선발하였고, 전국적 규모의 행동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도정부 수립은 반탁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리고 3·1절을 기해 임시정부를 봉대하는 형식으로 계획되었다. 반탁독립투쟁위원회의 주도로 대규모 반탁운동을 전개하고, 3·1절기념식 때 독립촉성국민회가 전국국민대표자대회를 소집하여 임시정부 봉대와 임시정부의 과도정부 추대를 결의한다는 것이었다. 한국혁명위원

25) 『동아일보』 1947년 1월 28일자, 「全愛國의인 各團體를 糾合코 反託運動을 積極展開」; 『독립신문』 1947년 1월 30일자, 「鐵筒같은 反託陣營 反託獨立鬪爭委員會遂結成」.

26) 『독립신문』 1947년 2월 20일자, 「金九主席의 獅子吼 右翼陣營強力化」.

27) 『조선일보』 1947년 2월 18일, 「國民議會로 改稱 統合案은 常任委員一任」.

28) 유정렬, 「임시정부 봉대운동 경위」, 『國民文化研究所五十年史 - 自由共同體運動의 발자취 -』, 국민문화연구소, 1998, 38~55쪽; 이문창, 『해방공간의 아나키스트』, 이학사, 2008, 232~288쪽.

회는 이러한 계획하에 3월 1일 임시정부 봉대와 임시정부의 과도정부 추대를 결의하고, 이를 국민의회에 건의하였다.<sup>29)</sup>

국민의회는 한국혁명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과도정권을 수립하였다. 국민의회는 과도정권 수립을 임시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민의회는 1947년 3월 3일 제41회 임시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원이 된 국무위원을 보선하고, 다음과 같은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주 석 : 이승만

부주석 : 김 구

국무위원 : 이시영, 조소앙, 조완구, 조성환, 황학수, 박찬익, 이청천, 조경환, 유립, 조만식, 김창숙, 박 열, 이을규, 오세창<sup>30)</sup>

과도정부의 주석은 이승만, 부주석은 김구였다. 그리고 기존의 국무위원이었다가 탈퇴한 김원봉·장건상·김성숙·성주식과 결원이 된 차리석·김봉준 대신에 오세창·김창숙·박열·이청천·조만식·이을규 등 6명을 새로이 국무위원으로 보선하였고, 각 부서 책임자는 주석과 부주석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임시정부를 봉대하는 형식으로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민의회는 이를 3월 6일에 공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과도정권 수립은 공포되지 못하였다. 미군정의 저지와 이승만의 반대 때문이었다. 미군정이 3월 5일 엄항섭과 김석항을 체포하고, 정부 수립을 선포하면 반란행위로 처벌할 것이며, 임시정부가 행동을 개시하면 조소앙·조성환·조경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sup>31)</sup> 그리고 미국에 가 있던 이승만도 김구에게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전보를 보내왔다.

백범은 미군정의 탄압과 이승만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과도정부로 활동하였다. 중국에 있는 주화대표단에 명령하여 미국·영국·중국·프랑스·소련 등 5개국에 “한국인이 자주적으로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승인하라”는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미소 양군의 철수와 신탁통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미군정의 브라운 소장을 방문하여 통치권을 임시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32)</sup>

과도정권을 수립하였지만, 과도정부는 ‘정부’로 역할하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이 주석에 취임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과도정부를 내세우지 말고 잠복상태로 있다가 정식정부가 수립된 후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임시키자’고 주장하고,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며 주석직을 사임하였다.<sup>33)</sup> 이로써 과도정부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29) 오대륙,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130쪽.

30) 『동아일보』 1947년 3월 5일자.

31) 정병준, 「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활동」, 『백범 김구와 민족운동연구』 7, 2009, 258쪽.

32) 『조선일보』 1947년 3월 9일자. 「金九氏等 ‘부’小將會見 臨政問題와 布告文問答」.

33) 『동아일보』 1947년 9월 17일자. 「國議主席을 拒否, 李承晚博士宣言書發表」.

## IV. 자주독립·통일국가 건설 추진

### 1. 자주독립국가

백범이 가장 큰 소원으로 삼았던 것이 있었다. 자주독립이었다. 백범은 해방 후 국내에 돌아와 ‘나의 소원’이란 글을 쓰면서, 자신의 소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네 소원이 무엇이나 하고 하나님께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나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나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 밖에는 없다.

(중략)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70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sup>34)</sup>

백범의 소원은 자주독립이었고, 자신의 삶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바쳤다. 그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도, 또 해방 후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전개한 것도 자주독립을 위해서였다. 백범이 소원한 자주독립은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국가를 유지 운영하는 것이었다.

백범은 자주독립에 방해가 되는, 즉 외세의 간섭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였다. 해방 전 연합국 사이에 전후 한국을 국제공동관리한다는 논의가 있을 때, 이를 반대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1942년부터 미국과 영국 사이에 전후 한국문제를 ‘國際共同管理’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소식을 접한 백범은 즉각 반대운동에 나섰다. 외무부장 명의로 전후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공동관리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민족은 절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sup>35)</sup>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제공동관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중경에서 활동하던 좌우의 진영의 독립운동 세력들을 집결시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를 在中自由韓人大會라고 불렀다. 재중자유한인대회는 1943년 5월 10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 독립을 요구하며 소위 國際監護나 다른 어떠한 형식의 외래간섭도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sup>36)</sup> 각 동맹국 원수들에게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즉각적인 독립을 촉구하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in due course’라는 단서에 반대할 것도 마찬가지이다. 1943년 12월 1일 미·영·중 3국 정상들이 ‘한국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후 한국독립을 보장받은 것이었지만, 여기에 ‘적당한 시기’

34) 김구, 『백범일지』(백범학술원 총서2), 나남출판, 2002, 433~434쪽.

35) 『戰後韓國獨立問題不能贊同國際共管』(三均學會, 『素昂先生文集』 상, 햇불사, 1979, 178쪽).

36) 『獨立新聞』 창간호, 1943년 6월 1일. 「大會決議案」.

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백범은 한국의 독립보장은 환영하였지만, 단서에는 반대하였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통치하며 우리 조국을 지배할 지력과 능력을 동등으로 가졌으며, 우리는 다른 족속이 우리를 다스리며 혹은 노예로 삼는 것은 원치 아니하며, 또 우리는 엇던 종류의 국제지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당연한 순서라는 말을 엇더케 해석하던지 그 표시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일본이 붕괴되는 그때에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치 않으면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이다.<sup>37)</sup>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게 된 데에는 백범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백범은 장개석이 회담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1943년 7월 26일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장개석을 찾아가 한국의 독립을 관철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sup>38)</sup> 그리고 장개석은 회담에서 이를 관철시켰고, 이것이 카이로선언으로 발표된 것이다.

그렇지만 백범은 ‘적당한 시기’ ‘적절한 절차’라고 번역된 ‘in due course’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리고 조건부 독립에 반대하고, 한국은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독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공동관리’나 ‘신탁통치’라는 명의로 또 다른 지배가 이어질 경우,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독립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해방 후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각 반탁운동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주독립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백범은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각계 인사들과 함께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고 반탁운동에 나섰다.<sup>39)</sup> 반탁운동에 나선 데는 별다른 고려가 없었다. 중경에서 전개한 국제공동관리 반대운동의 연장이었다. 국제공동관리에 반대하였듯이, 신탁통치문제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백범의 반탁운동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인 동시에 자주독립국가 수립운동이었다. 독립국가 건설에 있어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제하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신탁통치가 이러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그 나라에 가장 미친한 자가 되어도 좋다”고 하였듯이,<sup>40)</sup> 백범의 염원은 오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다.

## 2. 통일국가

자주독립국가와 더불어 백범은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소

37) 『신한민보』 1943년 12월 9일자(『백범김구전집』 5, 334쪽).

38)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95주년기념 학술회의 발표요지), 2014, 10~18쪽.

39) 이완범, 「백범 김구의 신탁통치 반대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7, 백범학술원, 2009, 205~206쪽.

40) 김구, 『백범일지』, 434쪽.

련군과 미군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하면서 국토와 민족은 분단되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소간의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1946년 6월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며,<sup>41)</sup>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제의하였다. 국토와 민족의 분단,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 문제가 대두되면서, 백범은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백범은 38선을 경계로 한 분단도, 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는 임시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을 전개한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자주독립국가는 당연히 통일된 국가였다. 또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민족을 분단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북쪽에서도 정부를 수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백범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47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단독정부 수립 문제가 구체화되어 갔다.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미소가 대립관계로 돌아섰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로써 한국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넘겨졌다. 여기에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은 국민의회에서 설립한 과도정부를 부정하고, ‘38이남은 고사하고 다만 한 道에나 한 郡 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야 한다’며,<sup>42)</sup>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백범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통일국가 건설 문제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그 방향을 잡았다. 1947년 10월 15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남북대표회의를 조직하여, 미소 양군 철폐 → 남북통일선거 실시 → 국민회의 완성 → 중앙정부 조직 → 우방국과의 교섭을 결의한 것이다.<sup>43)</sup> 이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방안과 단계를 정립한 것이었다.

이 무렵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도파에서도 남북총선거, 남북지도자회의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백범은 김규식과 연계를 추진하였다. 1947년 11월 한독당은 민주독립당·근로인민당 등 중도파의 정당과 함께 12정당협의회를 결성한 것이다. 그리고 11월 5일 12정당협의회는 ‘자주독립의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38선 철폐·남북교류 보장·전국적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미소 양군의 철병과 남북정당대표회의의 구성을 결의하였다.<sup>44)</sup>

백범은 김규식과 함께 남북요인회담을 추진해 나갔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만나 이를 제시한 것이다. 유엔위원단은 1948년 1월 8일 서울에 도착하였고,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였다. 백범은 1월 26일 유엔위원단과 만났다. 유엔위원단을 만나기 전 백범은 김규식을 방문하여 의견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유엔위원단에 미소 양군 철폐 → 남북요인회담 → 남북총선거 →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1월 28일에는 6개항의 의견서를 보내 전국총선거 및 통일정부 수립·남한단독선거

41)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564쪽.

42) 정병준, 『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활동』, 261쪽.

43) 『동아일보』 1947년 10월 19일자(『백범김구전집』 8, 278쪽).

44) 『경향신문』 1947년 11월 7일자(『백범김구전집』 8, 281쪽).

반대·양군철퇴·남북지도자회담을 제의하였다.<sup>45)</sup>

백범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세력들이 비난을 퍼붓기도 하였다. 한국민주당이 중심이 된 한국독립수립대책협의회에서 “우리는 금후에는 김구를 조선민족의 지도자로는 보지 못할 것이고 크레틀린군의 한 신자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sup>46)</sup>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백범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2월 4일에는 김규식과 만나 북한의 김일성·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을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하고, 2월 6일에는 유엔위원단의 메논 의장을 만나 남북요인회담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리고 2월 10일 「3천만 동포에게 泣告함」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독정부 수립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과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남북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민족을 死坑에 넣는 극악극흉의 위험일 것이다.

(중략)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一身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sup>47)</sup>

백범은 북한의 김일성·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을 제의하였다. 2월 16일 백범은 김두봉에게 남북요인회담을 제의하는 서신을 작성하고, 이를 유엔위원단 캐나다 대표를 통해 영국-소련-북한으로 전달하였고, 서울에 있는 소련군대표부에게도 전달한 것이다.<sup>48)</sup> 북한에서 연락이 온 것은 한달이 지나서였다. 3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평양에서 남북조선의 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였고, 김일성·김두봉 명의로 된 답신서한도 도착하였다.

이동안 유엔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하였다. 2월 26일 유엔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권고한 미국측의 제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리고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3월 4일 특별성명을 통해 5월 9일(후에 10일로 정정)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었다.

백범은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3월 12일 김규식·조소앙·김창숙·조완구·홍명희·조성환 등과 ‘7거두성명’을 발표한 것이 그것이었다. 이를 통해 남한만의 총선거와 북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정을 비판하면서, 남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면 민족적 참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미소양국이 군사상 필요로 일시 설정한 소위 38선을 국경선으로 고정시키고 양정부 또는 양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남북의 우리 형제자매가 미소전쟁의 前哨戰을 개시하여 銃劍으로 서로 대하게 될 것이 明若觀火한 일이니 우리 민족의 참화가 이에서 더할 것이 없다.

45) 『동아일보』 『조선일보』 1948년 1월 28일(『백범김구전집』 8, 306쪽).

46) 『동아일보』 1948년 1월 31일자(『백범김구전집』 8, 308쪽).

47) 「삼천만동포에게 泣告함」, 『백범김구전집』 8, 564-571쪽.

48) 서중석, 「남북협상과 백범의 민족통일노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3, 2005, 147쪽.

(중략) 반쪽이나마 먼저 독립하고 그 다음에 반쪽마저 통일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듯 하되 실상은 반쪽 독립과 나머지 반쪽 통일이 다 가능성이 없고 오직 同族相殘의 참화를 激成할 뿐일 것이다.<sup>49)</sup>

백범에게는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하면서 가졌던 경험이 있었다. 좌우익 독립운동 단체들이 서로 분립하여 대립하였던 실상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남북에 각기 정부가 수립되면, 우리 민족의 의도와는 달리 미소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을 일으키는 민족의 참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통일국가 건설은 민족의 참화를 막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을 때, 좌익진영의 세력들과 통일을 실현하고,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한 경험도 있었다.<sup>50)</sup> 이러한 경험이 남북요인회담을 추진하게 한 것이다.

백범은 4월 19일 평양을 향해 떠났다. 그리고 5월 5일 서울로 귀환할 때까지 평양에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만나 남북협상을 전개하였다. 남북협상에는 김규식을 비롯하여 조소앙·홍명희 등 많은 인사와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남북협상은 크게 두 개의 회의로 열렸다. 하나는 남과 북의 정당 및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였고, 다른 하나는 남북요인 15명이 참가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였다. 그리고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이 참여한 ‘4김회담’도 가졌다.

백범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4월 22일이었다. 회의는 남한에서 올라간 인사들의 입장으로 시작되었고, 백범은 조소앙·조완구·홍명희와 함께 주석단으로 보선되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으로 고난을 받았던 일과 민족이 단합하여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남쪽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또 북쪽에서 단독정부를 세우는데도 반대한다고 하였다.<sup>51)</sup>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조선동포에게 檄함>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공동성명서> 등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이 중 ‘공동성명서’는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1.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하는 것이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2. 외국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음을 확인
3.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적 입법기관을 선거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
4. 남북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sup>52)</sup>

이것이 남북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통일정부 수립 방안이다. 방안은 미소 양군 철퇴 → 전조선정치회의의 소집 → 임시정부 수립 → 통일적 입법기관 →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이었다.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정부 수립 방안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남과 북에서 이를

49) 「통일독립달성을 위한 7거두성명」, 『백범김구전집』 8, 641~644쪽.

50)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중정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59~63쪽.

51) 김신, 『김신희고록 : 조국의 하늘을 날다』, 돌베개, 2013, 127쪽.

52) 송남현, 『우사 김규식의 생애와 사상 : 몸으로 쓴 통일운동사』 3, 한울, 2000, 116쪽.

실행할 의지가 없었고, 별도로 정부 수립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북쪽에서는 남북협상이 진행되던 4월 29일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초안통과회의를 가졌고, 남쪽에서는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한 것이다.

## V.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에 대한 꿈

### 1. 문화국가 건설

백범이 건설하고자 하였던 또 하나는 ‘문화국가’였다. 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하겠다는 것은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백범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sup>53)</sup>

백범이 원한 것은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강력한 나라도 아니었다. 그가 원하였던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백범의 생각이었다.

백범은 문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제도였고, 다른 하나는 국민교육의 완비였다. 백범은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자신의 정치이념을 ‘자유’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이며,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 인류의 가장 크고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하나는 교육을 꼽았다. 백범은 청년시절 황해도 장련에 光進學校를 세우기도 하고, 西明義塾과 楊山學校 교사로도 활동하였으며, 해서교육총회 학무총감으로 황해도 각 군을 순회하며 환동회·강연회 등 교육활동에 남다른 정열을 쏟기도 하였다.<sup>54)</sup> 그리고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광복 후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계획인 건국강령을 발표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국비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그 제도와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놓았다.

53) 김구, 『백범일지』, 442쪽.

54) 최기영, 「백범 김구의 애국계몽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36~37쪽.

한국한 이후에도 백범은 국비의무교육을 강조하였다. 1945년 12월 27일 서울 중앙방송국에서 「삼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방송을 한 일이 있다. 이는 한국한 후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었다. 이를 통해 백범은 자신의 여러 가지 포부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여 신민주국을 건설”하자고 하면서, “교육의 균등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의무교육을 국비로서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sup>55)</sup> 국비의무교육 주장하였다.

백범이 주도하고 있던 한국독립당도 교육정책의 핵심을 국비의무교육에 두고 있었다. 한국독립당은 1945년 8월 25일 제5차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해방 후 당이 추진해나갈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 중 교육과 관련하여 “국비교육시설을 완비하여서 기본지식과 필수기능을 보급할 것”, “국민의 각종 교육의 경비는 일률로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하여,<sup>56)</sup> 국비의무교육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백범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수준 높은 교육이 있어야 수준 높은 문화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문화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것은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민족의 문화를 사모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백범은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대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고 하였다.<sup>57)</sup>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기초는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이었다.

## 2. 세계 평화에 대한 꿈

백범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이 있었다. 우리 민족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자는 것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을 가진 것이다. 백범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한마디로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집이 되어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8)</sup> 이를 위해 우리 문화가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였고,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세계에 실현되기를 바랐다.

백범은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대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하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로 발휘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55)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8, 111~112쪽.

56)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8, 30~31쪽.

57) 김구, 『백범일지』, 445쪽.

58) 김구, 『백범일지』, 435쪽.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sup>59)</sup>

백범이 문화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평화였다. 각기 민족마다 최선의 문화를 갖고, 그 문화의 기초위에 각 민족이 서로 돕고 사는 그러한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 단계는 우선 남의 간섭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하고, 민족의 정신력과 문화를 발휘하는 문화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백범은 이러한 꿈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이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이를 ‘공상’이라 여길 수 있다는 염려도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종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sup>60)</sup>

백범은 세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보았다. 그 길은 각각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발휘하는 국가를 세우고, 서로 돕는 데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아무도 못하였다고 해서 ‘공상’이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도 한 일이 없으니, 우리가 하자는 것이었고, 백범은 우리 민족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sup>61)</sup>

백범은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고, 그 일을 우리 민족이 하자고 하였다. 그 길은 높은 문화를 가진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이 먼저 문화국가를 건설하고, 이를 세계에 모범이 되도록 하면,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백범은 세계평화가 우리나라에서 비롯되기를 원하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59) 김구, 『백범일지』, 435~436쪽.

60) 김구, 『백범일지』, 436~437쪽.

61) 김구, 『백범일지』, 443쪽.

## VI. 맺음말

백범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해방 후 국토와 민족이 분단될 위기를 살아가면서 당면한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그의 활동에는 목표가 있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과 민족의 분단을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화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꿈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백범의 활동을 이해하려고 할 때, 유념할 것이 있다. 백범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백범은 1926년 국무령으로, 1940년 주석으로 선출되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경험, 그리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킨 지도자였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백범은 자신이 주도해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민에게 봉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과도정권에 임시정부를 인계한다고 하였다. 백범은 이러한 방침을 1945년 9월 3일 당면정책으로 발표하였고, 이를 추진해 나갔다. 1946년 2월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비상국민회의를 설립하고 최고정무위원회라는 기구를 조직하여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의 작용으로 최고정무위원회의 명칭은 민주의원으로, 성격은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바뀌어 버렸다.

비상국민회의를 통한 과도정권 수립이 좌절된 후, 백범은 다시 과도정권 수립을 추진하였다. 1947년 3월 비상국민회의를 잇는 국민의회를 설립하고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보선하는 형식으로 주석 이승만·부주석 김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권을 수립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승만이 이를 부정하고 주석에 취임하지 않음으로써, 과도정권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백범은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자주독립국가는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를 유지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은 연합국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던 국제공동관리·신탁통치 등을 배격하는 것이었다. 1943년 미국과 영국사이에 전후 한국문제를 국제공동관리로 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무부장 성명을 통해, 또 중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 세력들과 함께 재중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전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선언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적절한 시기’라는 조건부를 반대하며, 일제가 패망하는 즉시 한국은 독립되어야 하고, 만일 일제에 이어 또다른 형태의 지배가 이어질 경우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독립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해방 후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반탁운동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백범은 통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일제 패망과 더불어 소련군과 미군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또 이승만을 중심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추진되자, 백범은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백범은 일제가 패망하면 그 즉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자주독립국

가는 당연히 통일된 국가였다. 그리고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북에서도 정부를 수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족은 분단된다는 것이다. 민족분단의 결과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소의 앞잡이가 되어 전쟁을 하게 되는 민족적 참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것이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국가 건설을 추진한 이유였다.

백범은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소 양군 철퇴 → 남북요인회담 → 남북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 수립이 그 방안이었다. 백범은 김규식과 함께 이를 추진하였고, 유엔위원단에게도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북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하자며,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 요인회담을 제의하는 서신을 보냈다. 1948년 4월 평양으로 올라가 남북협상을 전개하였고, 미소 양군 철퇴 → 전조선정치회의의 소집 → 임시정부 수립 → 통일적 입법기관 설립 →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방안과 절차에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남과 북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백범은 문화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백범의 꿈은 “세계 인류가 네요 내요 없이 한집이 되어 사는 것”, 즉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우선 남의 간섭없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국가를 세워 수준 높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민족마다 최선의 문화를 갖는 문화국가를 세우자고 하였다. 문화국가를 세워 각 민족이 서로 돕고 사는, 즉 지구상의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 백범의 꿈이었다.

### 〈참고문헌〉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凡金九全集』, 1999.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196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自由新聞』

『(환국속간)독립신문』, 백범학술원, 2012.

김구, 『백범일지』(백범학술원총서2), 나남출판, 2002.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이문창, 『해방공간의 아나키스트』, 이학사, 2008.

- 도진순, 「해방 직후 김구·김규식의 국가건설론과 정치적 의미」,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995.
- 박진희,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21, 1996.
- 한시준, 「이승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승만 연구』, 연세대 출판부, 2000.
- 김삼웅,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 서중석, 「남북협상과 백범의 민족통일노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3, 백범학술원, 2005.
- 한시준, 「백범 김구의 신국가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3, 백범학술원, 2005.
- 신용하, 「백범 김구의 새 민주문화국가 건설론과 세계평화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6, 백범학술원, 2008.
- 정병준, 「해방 후 백범 김구의 건국노선과 평화통일 사상」,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7, 백범학술원, 2009.
- 이완범, 「백범 김구의 신탁통치 반대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7, 백범학술원, 2009.
- 오대록,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6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 Abstract |

## Baikbum KimKoo's Dream for Building an Autonomic Independent Unified Nation and for the World Peace

Han, Seejun\*

Baikbum was a great leader who lived through the Japanese empire's aggression and colonial rule and the crisis of national and territorial division after the liberation, and who attempted to resolve the urgent national problems. His activities had goals: the first was to regain the territory and the sovereignty stolen by the Japanese empire and build a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and the second was to foil the national division and found a unified nation. He also had another goal to found a civilized nation and serve for the world peace.

Baikbum, developing the independent movement centering arou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ried to build an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The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that he tried to build meant a nation governed by our own people without any foreign interference. When he learned that the US and the UK in 1943 agreed to resolve the matter of Korea within international joint supervision, and when he learned that the Moscow Conference of 3 Foreign Ministers in 1945 decided the trusteeship over Korea, he held opposition movement. It was because the international joint supervision and the trusteeship meant another interference of foreign powers succeeding the Japanese empire.

As Baikbum experienced the territorial and national division, he tried to establish a unified nation. As the Soviet army and the US army separately occupied the Korean peninsula by the 38<sup>th</sup> parallel, and as Syngman Rhee propelled the South to establishing separate government, Korea faced the crisis of the territorial and national division. Baikbum in this situation tried to found a unified nation. He thought that if the South established a separate government, the North would do so as well; and then the nation would be divided. He believed that the result of the division would be a nationally disastrous war regardless of our nation's own will, as the two would become the informants of the Soviet and the US.

Baikbum proposed the way for founding a unified nation: the pullout of armies of the Soviet

---

\* Professor, History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and the US → the South and North key-figure meeting → the South and North unified general election →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government. Baikbum, with Kim Gyushik, propelled it, and proposed it to the UN committee. And then, he sent Kim Ilsung and Kim Dubong letters suggesting the South and North key-figure meeting to discuss the matter. April of 1948, he went to Pyongyang, held the South-North negotiation, and achieved an agreement for the way and the steps to establish a unified democratic government: the pullout of armies of the Soviet and the US → the convocation of All-Joseon Political Meeting → building a provisional government → founding a unified legislature → founding a unified democratic government. However, as the South and the North separately established governments, it could not be realized.

Baikbum had a dream for building a civilized nation and for world peace. Baikbum's dream was "all people in the world living together without you-me discrimination": building a country all people in the world can live peacefully. The way was to build a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without any foreign interference, to build a nation confirming people's liberty in order to create high-level culture, and for each people to build a civilized nation with its best culture. It was Baikbum's dream that each people would build a civilized nation and help each other, and that all people on the earth could experience peace and happiness within the world peace.

**[Key Words]** KimKoo,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utonomic independent nation, trusteeship, unified nation, south-north negotiation, civilized nation, world peace